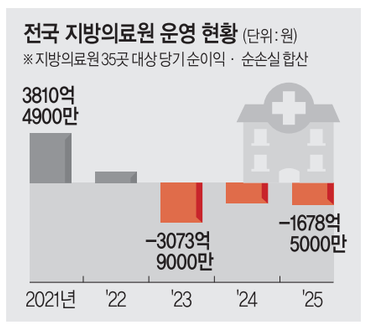
무너지는 지방의료원…"6350억 적자에 월급도 못줘"

<3년간>

코로나 최전선 지켰더니 빚더미

전국 35곳 작년 적자 1678억원
체불임금 부산 33억·속초 20억

감염병 전담 지정때 외래 중단
해제된 후에도 환자 안 돌아와
병상 가동률 60%대로 떨어져



'코로나19 극복 일등 공신'이자, 의정갈등 속에서도 진료실 불을 끄지 않았던 전국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지난해 16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병원에서 기피하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은 공공 의료 체계의 핵심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내부에서는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는 1678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601억5600만 원)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누적 적자만 6353억9600만 원에 달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의 월급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곳도 지난해 7곳에 달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한때 직원들의 수당과 급여 체불 금액이 20억7100만 원에 달했다. 부산의료원도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 33억4483만 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서귀포의료원, 강진의료원, 청주의료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체불금액이 발생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 김영완 서산의료원 원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흑자가 나는 곳도 있었고 적자 폭이 이렇게 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들이 적자로 돌아선 데에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중단하다시피 하고, 입원하고 있던 병동 환자의 대부분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2022년 6월에는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이 해제됐지만 만 3년이 지난 뒤에도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이라는 이미지의 악영향으로 환자들 사이에서는 지방의료원 기피 현상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환자들 한테 병원을 옮기라고 내쫓다시피 하니 욕설과 항의가 빗발쳤었다"며 "악감정을 가지고 떠난 환자들이 다시 돌아올리는 만무하다"고 하소연했다.

국민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76.5%가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원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조사된 공공병원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병상가동률이 80.5%에 달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병상가동률은 50%를 밑돌았다. 지난해 64.2%까지 오르긴 했지만 병원 유지에는 턱없이 모자르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지역의료원은 비급여 진료 제한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은 돼야 한다"며 "지방의료원만의 예산을 마련해주고 지원도 늘려야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공공소각장 건립기간 11년→8년으로 단축"

기후부, 조기 확충 방안 발표

정부가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건립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앞당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불거진 이른바 '쓰레기 원정 처리' 사태를 해결하고,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각시설 조기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입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전 단계에 걸친 행정절차의 과감한 단축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보상 확대다.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1년 8개월이 소요되는 건립 기간을 8년 2개월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계별 걸림돌을 제거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기존 부지 내에 시설을 증설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대신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갈음해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기본계획 및 행정절차 단계에서는 시설 용량과 총사업비 산출 기준을 표준화해 사업 변동성을 줄인다. 복잡했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순차 진행하던 방식에서 동시 처리 방식으로 바꾸고, 설계적정성 검토 횟수도 줄여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피 시설 건립의 최대 난관인 주민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도 대폭 강화한다. 소각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해 줄 때 징수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늘어난 재원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지원 범위를 기존 소각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전격 확대한다.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노지운 기자

'스벅 탱크' 파문에 마케팅업계 긴장
"홍보문구 단어 선택 조심하라" 지침

일부 기업선 불매운동 동참도
"대중 윤리적 기준 매우 높아져"

스타벅스코리아와 무신사가 이른바 '역사 조롱 마케팅' 논란으로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유통·패션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이 자사 광고 담당자들에게 '마케팅 문구 주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는 소비자 지급 경품에서 스타벅스 등 논란이 된 기업 상품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자사 마케터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문구 주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한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 중인 20대 A 씨는 "회사에서 스타벅스 논란 이후 마케팅 문구를 조심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특히 역사와 젠더 이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역사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최근 마케터들이 모여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데, 광고주들이 SNS 이벤트 경품에 있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전부 다른 걸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한 맘카페에 제품을 홍보하던 기업도 지난 20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기업의 제품을 계속 소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벤트 경품을 다른 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한국보다 소비자 다양성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는 역사나 인종차별 논란이 될 법한 마케팅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터로 근무 중인 B(25) 씨는 "팀 회의에서 역사나 인종과 관련된 이슈의 경우 단어 하나하나 사용까지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윤리적 기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책임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스타벅스 컵 깨며 규탄 21일 광주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코리아 규탄 기자회견 장소에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고 찌그러진 채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열받은 바다…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비 많이 올듯

기상청 '6~8월 날씨 전망' 발표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6~7월에는 비가 전보다 많이 내리고, 여름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기상청의 '3개월 날씨 전망'(6~8월)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월별 평균기온은 6월 21.1~21.7도, 7월 24.0~25.2도, 8월 24.6~25.6도로 예상된다.

6~7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로 분석됐다.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이고 비슷할 확률과 낮은 확률은 각각 40%와 10%로 파악됐다. 올여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북인도양과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이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바다에서 대기로 열에너지가 공급돼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 순환이 강해진다.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이 늘어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 다만 현재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다른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로 인한 영향이 지속될 경우 덜 더울 가능성도 있다.

강수량은 6~7월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8월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노지운 기자

장대B구역 공고 제2026-12호

토지등 소유자 소재 확인 2차 공고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내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장대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사업의 명칭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3. 사업구역내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물 내역

구분	등기부등본상 소재 지번	면적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27	40.6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59	107.9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1-10	48.00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1-20	78.9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4-40	71.28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3-05	15.21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12	49.2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19	53.89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4-28	59.7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11-05	130.63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1-11	32.8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59	53.74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4-03	22.17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47	52.36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4-06	41.04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03-02	76.74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03-04	72.56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51	92.61

4. 위 소재지 지상 건물중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하여 공고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에 따라 해당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의 건물 내역이 명백히 제3자의 소유권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재지번 조합원의 종전 감정평가 금액에 합산하여 권리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위 제3항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물 내역의 소유자는 『대전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정한 소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증빙이 되야 합니다.

조합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3 605호(봉명동, 대전유성신협신사옥)
조합사무실 전화번호 : 042-822-7793

2026년 5월 22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직인생략)

문화일보
광고문의
301-5566

희망을 꽃피우는 아이가
너였으면 좋겠어

모든 아이들에겐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꿈꾸고 도전하는 아이로 기르는 인성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WE START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후원문의 1577-9572

후원금은 국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건강, 교육,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소득공제는 물론 소식지와 정기레터를 보내드립니다.